

국가재정·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

무역기반 재정·금융범죄(TBFC*) 단속방안

* Trade-Based Financial Crime

2026. 9. 10.

관 계 부 처 합 동

I. 추진 배경

□ 국민주권정부는 불법·편법을 바로잡는 ‘국가정상화 프로젝트’ 중

○ (분야) 특히 보조금·조달·금융 분야를 지목*하여 중점 정비

* [26.7.15. 제2차 경제부처 업무보고 지시사항] “보조금 부정수급,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입찰, 형식적인 주주총회 등 보조금·조달·금융 관련 비정상적 관행을 전방위적으로 정비할 것”

○ (동향) 보조금·자본시장 소관부처 주도로 범부처 합동 점검단* 신설

* [기획예산처] 440명 규모의 ‘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 점검단’ 편성 추진(26.3월)
[금융감독원] ‘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’을 설치하고(25.7월) 90명 규모로 확대

□ 최근의 무역범죄는 단순 탈세목적을 넘어 재정·금융범죄로 진화

○ 정부보조금·자본투자 등을 편취하기 위해 무역실적을 부풀리거나 부정 조달납품을 위해 저가 외국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법

【 최근 적발되고 있는 무역기반 재정·금융범죄의 주요 유형 】

- ① (자본시장 교란) 수출입실적 조작 또는 허위·가장무역을 통해 매출을 부풀려 공시하고 주가 부양, 부정 상장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
- ② (공공조달 부정납품)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(계약)금액을 고가로 조작한 후 공공기관 등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
- ③ (정부 보조금 부정수급) 수출입거래 조작을 통해 무역실적 기반으로 지급되는 국가·지자체 보조금 등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행위
- ④ (정책·무역금융 편취)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수출입 실적 조작, 허위 무역 거래를 통한 불법 대출 및 정책금융 부당 편취 행위

□ 부처 간 통합·합동점검 없이는 무역기반 재정·금융범죄 척결 요원

○ 관세청은 무역+외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실제 수사로 이어낼 역량이 있지만, 추가 정보가 없으면 재정·금융범죄자의 정확한 식별 제한

○ 자본시장·조달·정부지원사업 운영기관도 심사 과정에서 수출입 실적·원산지 조작행위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

⇒ 수출입거래의 조작을 수단으로 하는 각종 재정·금융범죄와 부정행위를 TBFC(Trade-Based Financial Crime)로 칭하고 단속 역량을 집중

⇒ 업체정보 공유부터 후속조치·제도개선까지 전 과정에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협업하는 <통합 합동점검·단속체계> 및 TBFC 특별수사단 운영

II. TBFC 단속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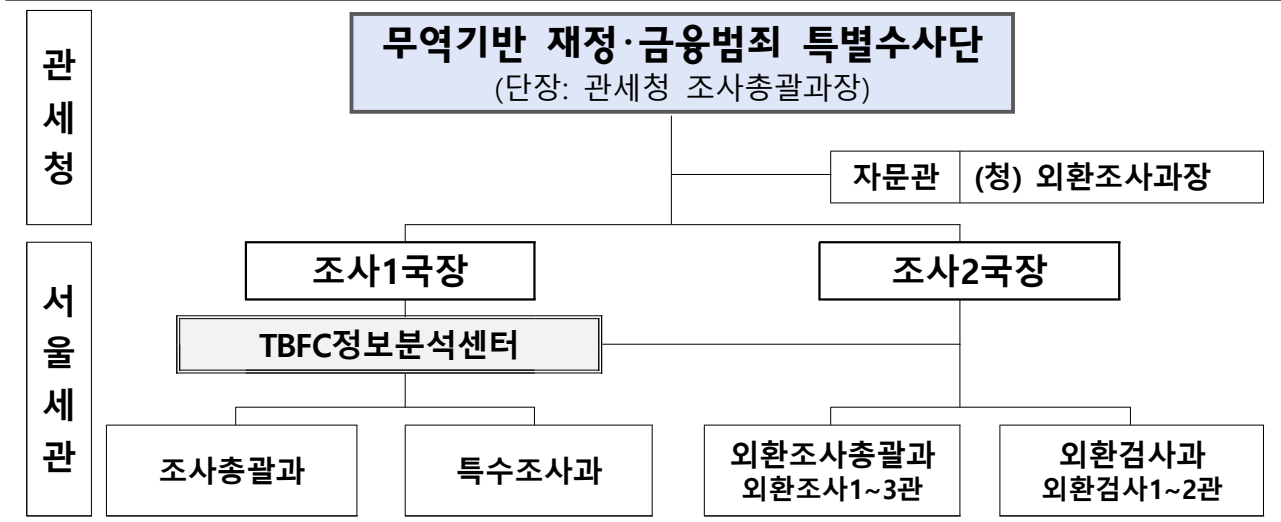
미션

튼튼한 경제,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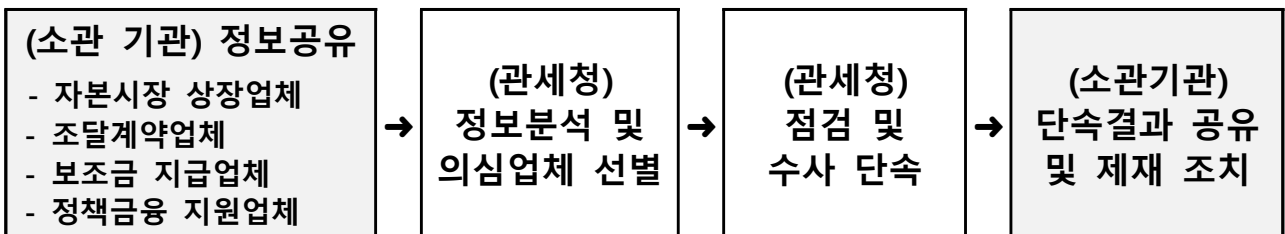
목표

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부재정 집행 및 자본시장 관리환경 조성

[관세청 TBFC 특별수사단 구성도]



[TBFC 통합 합동 점검·단속체계 프로세스 및 운영계획]



1. 자본시장 교란

- ① 시장퇴출 회피를 위한 수출실적 조작
- ② 신규상장 기업의 수출실적 조작

2. 공공조달 부정납품

- ① 원산지 국산 둔갑
- ② 조달청 지정우수기업 제도 악용
- ③ 수요기관별 자체조달계약 부정납품

3.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

- ① 수출보조금 편취를 위한 수출실적 조작
- ② 건강보험급여 편취를 위한 수입가격 조작

4. 정책·무역금융 편취

- ① 정책금융 편취를 위한 수출실적 조작
- ② 무역금융 편취를 위한 무역서류 위조

Ⅲ. 4대 분야별 점검계획

1

자본시장 교란

① 부실 상장기업의 시장퇴출 회피를 위한 수출실적 조작 점검

- (단속방안) 부실기업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단계적 시장조치*를 회피하려고 그 전후에 수출실적 등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지 점검 중

* [분석대상 4개 조치내역] 불성실공시법인 지정, 투자주의 환기, 관리종목 지정, 상장폐지

② 부정 신규상장 목적의 수출실적 조작 점검

- (위험유형) 자격미달 기업이 상장 요건을 부정 충족하거나 회사 가치를 부풀려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수출실적 등을 조작
- (단속방안) 코스닥·코넥스 등 하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·심사 중인 기업 목록을 공유받아 부정상장·주가부양 목적의 조작 점검 추진

2

공공조달 부정납품

① 부정 조달납품 목적의 저가 수입물품 국산 둔갑행위 점검

- (위험유형) 국내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등록된 물품을 납품하면서 저가 수입품을 국산 둔갑시키고 차액을 편취
- (단속방안) 해당 품목·업체를 분석해 조달청*과 원산지 합동점검

* 관세청-조달청은 2017년부터 MOU를 체결하여 관련 정보 공유 및 협업 중

② 조달청 지정우수기업 제도 악용 점검

- (위험유형) 조달청 지정우수기업 선정·연장 시 제공되는 국내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의 혜택*을 노리고 수출실적을 조작해 신청

* 우수조달물품,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(G-PASS) 등

- (단속방안) 조달청과 지정우수기업 목록을 분석하여 지정기업 중 선정·연장 전후로 수출실적 조작이 있었는지 합동점검

③ 수요기관별 자체조달계약 점검

- (단속 방안) 수요기관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조달계약 중 점검이 필요한 분야의 계약정보 입수·분석을 위한 추가 협의

3

정부 보조금 부정수급

① 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실적 조작 점검

- (위험유형) 수출실적은 정부 보조금의 대상선정 및 지원수준 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청기업이 수출실적을 과다 조작
- (단속방안)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중기부 등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수혜업체 명단을 공유받아 보조금 신청 전후 수출실적 조작 점검*

* 중기부 3개 지원사업 대상업체 목록을 분석해 최우선적으로 16개 사 점검 착수

② 기타 국가재정·급여 편취 목적의 수입단가 고가조작 점검

- (단속방안) 국민건강보험공단(복지부*)과 협업하여 급여대상 품목 및 공급업체 명단 중 급여편취 목적의 수입단가 고가조작 점검

* 관세청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와 MOU를 체결하여 관련 정보 입수 중

4

정책·무역금융 편취

① 정책금융 편취 목적의 수출실적 조작 점검

- (위험유형) 정책금융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거나 이자율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 시 수출실적 조작 우려
- (단속방안) 정책금융을 운영하는 국책은행 등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정책금융 수혜업체의 신청 전후 수출실적 조작혐의 점검

② 민간 무역금융 편취 목적의 무역서류 위조 점검

- (단속방안) 무역보험공사*(민간은행 포함)와 무역보험·금융지원 내역을 분석하여 부정대출 목적의 신용장 등 무역서류 조작 점검

* 관세청은 2015년부터 무역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관련 정보 입수 중

IV. 향후계획

- (기관간 협의·소통) 중기부, 조달청, 무역보험공사 등 소관부처와 수시로 공유정보를 활용한 관세청 단속경과 등 공유·협의
- (근거 강화) TBFC 통합 합동점검·단속체계가 지속·체계화될 수 있도록 협업의 목적·공유대상 정보 등을 명시한 근거 강화 추진
 - (MOU) 정보공유→점검·단속→후속조치·제도보완으로 이어지는 통합 합동점검체계에 참석하는 모든 기관의 합동 MOU 체결 검토
 - (법령개정) 관세법 상 입수가능한 자료에 TBFC 공유정보 추가를 검토하고, 필요 시 소관부처 법령에도 자료제공 근거 명시 제안
- (홍보·경과보고) 특별수사 결과 브리핑 등을 실시하여 TBFC 특별수사단의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사건의 유형을 지속 공개

V. 기대효과

- (기관별 효과) 관세청과 소관기관 모두 윈-윈 효과 예상
 - 관세청은 추가 정보를 활용하여 혐의업체를 정밀하게 단속하고, 소관기관은 점검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으로 공정성·신뢰성 강화
- (궁극적 효과) 국가재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
 - ① (국가재정)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자에게 대한 국가재정 누수 방지
 - ② (자본시장)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주가조작을 엄단하여 선량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기여
 - ③ (국가지원의 공정성) 정당한 자격을 갖춘 기업과 국민에게 국가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 배분의 공정성 제고